민주, 李 소환 규탄…"尹 검찰 사법살인"

대검 항의 방문… "김건희부터 수사해야"

檢 '대장동 의혹' 李 27·30일 중 출석 통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수사를 규탄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당 대표의 출석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맞서 '김건희 특검' 추진 등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 10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한 데 이어, 또다시 이틀간에 걸친 소환 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로지 선거에 패배한 정적을 죽이려고 윤석열 검찰이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쯤 되면 법의 외관을 빙자한 사법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 정부 인사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는 전방위·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윤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는 면죄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여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기준 단 한 건도 없다"며 "김 여사가 깊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한동훈 장관이 연루된 의심을 받았던 검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가리려 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를 뒤늦게 수사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위를 떠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검찰이 김건희 수사를 방기, 회피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범들이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들의 조사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 촉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에서 열린 10.29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 尹 'UAE의 적 이란' 발언 "나가기만 하면 외교 참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이란 관련 발언에 대해 "이번엔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바로잡을 걸 약속하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외교 참사를 일으키며 국격을 훼손한다"며 "참사 때마다 문제없다고 우겨대는 게 습관이 됐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UAE 적은 이란 이란 외교적 실언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한·이란 양자 관계와는 무관하다며 장병 격려를 위한 말씀이라 변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이 작심 발언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한·이란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한 발언이란 점은 심각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의전 하나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순방 외교에서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또 "말실수, 외교 참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윤 대통령 실수를 막지 못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란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 대통령 발언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란에 뭐라고 해명할 건가. 대통령의 말실수라고 변명할 건가"라며 "대통령과 참모들이 왜 이런 문제를 만드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3월부터 예비군훈련 정상 시행 2박3일간 동원훈련 진행

국방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2023년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혼합형 예비군훈련(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예비군훈련을 진행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의 대비태세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 재개 등을 통해 전시 작계시행능력을 구비하고 임무수행 태세를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3일간 시행한다. 동원훈련은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 등을 중점으로 훈련 실전성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태 본격 조사 시작…檢, 오늘 구속 영장 청구

형사6부서 조사…횡령·배임·변호사비 대납 등 혐의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7일 오전 10시46분께 호송차를 타고 검찰에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그가 받고 있는 각종 혐의와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이날 김 전 회장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형사6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쌍방울 그룹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부서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다. 또 640만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넸다는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김 전 회장은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8개월 만인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의해 붙잡혔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불법체류 혐의를 부인하며 현지에서 재판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마음을 바꿔 12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다. 열악한 수용시설 환경과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날 0시50분 방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탑승, 오전 8시43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체포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현지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을 통해 김 전 회장의 귀국 비행편에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대기 "나경원 해임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 따른 결정"

대통령 비서실장, 본인 명의로 언론에 공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모들의 왜곡 보고를 시정하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며 직격했다.

김 비서실장은 17일 오후 3시26분께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도 밝혔다.

김 실장이 자신의 명의로 언론에 공지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 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썼다. 지금 윤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왜곡된 보고'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어 "대통령을 에워싸서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는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 세력을 서로 멀어지게 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을 해임한 데 대해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5·18 단체 "이제는 화해로 포용해야"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묘소서 헌화·묵념

"이제는 화해하며 서로를 끌어안아야합니다."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28묘역.

5·18민주화운동 피해 당사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관계자 10여 명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정면의 묘소 15기를 응시했다.

이들은 두 손에 꼭 쥐고 있던 흰 국화꽃 한 송이를 묘소 앞 제단에 천천히 내려놨다.

꽃이 바쳐진 묘소의 주인은 5·18 당시 투입됐다가 숨진 계엄군 사병들.

43년 전 계엄군의 총칼에 위협받았던 5월 단체 관계자들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조금씩 흐느끼며 묵념했다.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묘비를 쓰다듬던 한 5월 단체 관계자는 급기야 묘비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옆에 서있던 일행은 그에게 다가와 위로를 건네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참배 내내 눈물을 닦아냈던 이들의 흰 장갑은 어느덧 살갗의 색이 보일 정도로 투명해졌다.

5월 단체는 이날 특전사 동지회의 안내를 받아 현충원에 묻혀있는 5·18 당시 숨진 계엄군들을 참배했다.

국립현충원에는 5·18 당시 숨진 계엄군 23명(사병 15명·간부 8명)과 경찰 4명이 묻혀있다.

1980년 5월 21일 다른 계엄군이 모는 장갑차에 깔려 숨진 권 모 일병을 시작으로, 계엄군 사이 교전끝에 숨진 박 모 중사를 포함한 같은 부대원 9명 등이 한 자리에 있다.

5월 단체들이 이들의 묘소를 공식 참배하는 것은 5·18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5월 단체들은 지난 7일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특전사 출신 6명을 만나 '화해와 감사'를 주제로 한 후속 활동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5월 단체는 신군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특전사 등 계엄군의 상황, 이로 인해 40년 넘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사정을 감안해 이들 또한 피해자로 보고 연대를 청했다. /뉴시스

이재명 "민생 협력 제안에 野 탄압만"

긴급 민생프로젝트 언급…"무도, 무책임, 무능에 국민 절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잇단 수사와 관련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잔 제안에 야당 탄압으로 맞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긴급 민생프로젝트'와 관련해 "민생경제가 생사기로에 서 있는 지금이야 말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자는 제안에 이 정권은 오로지 야당 탄압으로 맞선다"며 "고통 받는 국민, 빈사상태에 놓인 경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무도, 무책임하며 무능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절망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막중한 국정 책임을 인식하고 허물어지는 지역경제 살리는 일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특위 활동은 끝났지만 진실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도 더했다.

그는 "윗선 누구도 책임 없다는 면죄부, 셀프 수사에 대한 국민, 유족 분노가 매우 크다"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이어갈 제도적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2월 안으로 선거법 개정 당론 정할 것"

민주 의원총회서 선거법 개정안 당론 정할 시점 언급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내달 말까지 의견을 모아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 당론 개정을 오는 4월 10일 이전에 해야 하지만 2월 말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대략적인 일정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내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일정과 함께 여태껏 진행돼 온 선거법 개편 논의를 공유했다고 한다.

오 원내대변인은 "혁신위에 두 개의 분과, 정치개혁분과·정당혁신분과가 있는데 장경태 의원이 정치개혁분과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려줬다"며 "향후 일정을 보면 선거법 관한 논의 등을 혁신 간담회 등을 통해 좀더 숙의하고 국민 혁신위원들을 선정, 전국 회의를 해 혁신안을 도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이슈되고 있는 것이 중대선거구제인데 (장 의원이)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가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을 알려주며 소선거구제의 차이, 그 장단점을 보완하고 연구해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호 매 만 평

이태헌